

IMF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IMF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다. 이글에서 필자는 외채탕감을 재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하며, 아시아통화기금(AMF) 설치를 아시아 각국에 제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준상

「한겨레21」 기자

지 보운동진영에게 던져진 어렵고 논란이 분분한 화두다. '재협상이 가능하냐'는 현실론에서부터 'IMF 프로그램에 저항해야 한다'는 당위론까지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또 IMF의 외환위기 원인 진단과 처방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다.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틀린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 그만큼 IMF 재협상을 위해 필요한 의제와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재협상 방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보면 정리해고와 공기업 민영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노동계는 이미 IMF의 목시적인, 그러나 핵심적인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IMF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권고하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셈이다. IMF와 분기별 거시지표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IMF와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재협상 의제들

재협상 의제의 경우, IMF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역시 고금리와 통화긴축, 재정긴축이다. 획일적인 국제결제은행(BIS) 자자기 본비율 8% 적용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12월 외환위기 이후 9,000여개의 기업이 망하고, 공식 실업자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 아래에

서 정부는 IMF와 벌이는 협상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고금리와 통화·재정긴축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 안에서는 경기부양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하고 터에, 오히려 긴축정책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강요하던 IMF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권고'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IMF 재협상 의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없이 깊어질 수도 있고, 몇가지 사안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재협상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몇몇 사안을 다루면서 주로 재협상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실제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몇몇 사안을 중심으로 재협상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설득력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긴축정책은 이미 정부가 재협상을 해오고 있는 터라 달리 논의할 게 없다. 다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BIS자기자본비율의 획일적인 적용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신용경색 해소가 난망할 것이라는 지적만 하고 싶다.¹⁾

때문에 BIS비율의 탄력적인 적용은 국민경제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진보진영이 요구해야 할 재협상 의제이다.

노동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제화가 불가피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이 제도들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관념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직, 교대제 변경,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엄격한 해고회피노력의무를 통해 정리해고 남용을 막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생기는 노동시장 분단과 기업별 노조 약화는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계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

1)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심화하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공조자금 투입 등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해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아래에서 연세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 비거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신규 기업대출을 꺼쥘 수밖에 없다. 대출규모가 커서 망할 경우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협조용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금융기관의 실점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기업 폐출 결정 운운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얘기는 난센스다. 기업 폐출에 따른 부실채권 누적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가져오고,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금감위의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꽂히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를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운운하는 것 역시 본지수를 잘못 짚은 주장이다. 이런 불가피한 이슈환의 탈출은 오직 BIS자기자본비율의 획일적인 적용을 피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금감위의 경고도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 은행들의 경우에도 6%수준이던 BIS자기자본비율이 8%대에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이걸 6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8%로 올리라는 금감위(사실은 그두에 있는 IMF)의 주장은 '구리를 금으로 만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미국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1985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6.27	6.17	6.36	6.40	6.67	7.18	7.85	7.88	8.31	8.27	8.42

* 자료 FRB, FBR Reserve Bulletin, 각주, 한국은행 (조사통계정보) 6월호에서 개인용



▲ IMF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다.

문제는 부채탕감

개인적으로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채 탕감 문제가 핵심적인 재협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

서 노동계가 꼭 의제로 거론해야 할 사안이다. 1600억 달리가 넘는 부채는 대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부채의 수렁덩이에서 베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부채 탕감의 내용은 두 가지가 돼야 한다. 하나는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에 뀌준 대출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것이다. 탕감 규모는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외채가 적정비율이 되는 수준. 예를 들면 '자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총외채가 줄어들어야 한다.²⁾

민간부채와 공공부채 등 나머지 외채 가운데 일부는 80년대 남미 부채위기 때 미국 재무부장관 니컬러스 브래디의 제안으로 실시했던 '브래디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외채를 채권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인데, 금리는 물론 낮아야 한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행한 미국 뉴욕 금융시장에서 40억 달러어치를 발행한 외국환평형채권과 비슷한 셈이다. 단 외평채는 정부 부채가 채권발행액만큼 늘어나는 데 비해, 브래디채권은 외채 규모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양자의 차이다.

2) 부채탕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해외 금융기관도 무분별하게 대출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장경제 원리다. 무설대출의 책임을 배우자와 채권자가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설대출의 책임을 물었다며 금감위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급격한 면 평사상 책임을 물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하지만 채권자는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 IMF는 '주식·채권 가격으로 채권자도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모이'고 있다. 채권자는 무설대출에 따른 손실을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부채탕감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IMF가 말하는 것은 미온비 투기성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을 말하는 것일 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IMF 언론은 문제를 왜곡·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풀의 손해도 보지 않았다.

AMF 설립해야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제기하는 것도 정부에 재협상을 다그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타이 바트화 폭락 이후 1,000억달러 규모의 AMF 설립을 제안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IMF는 IMF와 비슷한 기관이 아시아에 설립되는 것보다는 잠재적인 위기를 감시하는 느슨한 지역협의체가 필요하다며 AMF 설립에 극력 반대했다. 결국 일본의 AMF 구상은 그해 11월24일 아鲜血 정상회담에서 최종 좌절됐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AMF 설립은 엔화 약세, 높아지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외부환경이 갈수록 악화함에 따라 점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 자체 차원에서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한 완충판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외부환경의 악화에 따라 정부가 내세우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은 점점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 3대 외환보유국인 일본(2100억달러), 중국(1600억달러), 대만(1200억달러)은 물론 홍콩(900억달러) 등 달러는 아시아에 넘쳐나고 있다. 이 나라들이 300억달러씩만 출자해도 IMF에 비금가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AMF는 현실성이 높은 사안이다. 게다가 아시아 단일통화 창설 문제보다 아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고 공통분모가 넓은 편이다(아시아 단일통화가 빛을 보는 길은,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에서 동등한 비중의 기축통화로서 유통되는 것밖에 없다. 때문에 아시아 단일통화보다는 아시아 기축통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미국의 이해를 거슬러 약간의 주체적인 외교노력만 기울이면 된다.

AMF 설립과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진보진영이 부채탕감 방안을 IMF 개혁 논의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IMF 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채권자의 이해만을 대변해 온 조직인 IMF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동등하게 대변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 IMF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등한 기구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정해지는 IMF의 의결방식을 1국가 1의결권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IMF가 주식에 비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182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직이라는 단체의 본질적 특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 자유화를 IMF 목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쇄기를 띠는 것도 IMF 개혁의 또 다른 핵심

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는 맹목적인 자본자유화를 옹호하던 이전의 태도를 바꿔 '질서있는' (orderly) 자본시장 개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동 자유화가 선(善)이라는 IMF의 태도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

AMF 설립과 부채탕감, 그리고 IMF 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IMF 개혁없이 추가출자 없다'는 미국 공화당의 논리는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화당의 IMF 개혁 방안에는 부채탕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화당은 IMF가 국제투기자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슬깃한' 주장을 편다. 하지만 이런 왜곡을 시정하려면 IMF를 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공화당 주장의 핵심이다. 모든 형태의 구제금융이 시장이자율 수준에서 제 공돼야 한다는 것도 IMF에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는 맥락에 놓여 있다. 당연히 공화당은 출자비율에 따른 의결권은 아무 문제삼지 않는다. IMF 개혁은 IMF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방식과 위기 개입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의 IMF는 한계는 있으나, 꼭 필요한 조직이다.

정부가 AMF 설립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 자체가 부채탕감과 IMF가 죄다 가져간 경제주권의 일부라도 되찾아오기 위한 재협상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교섭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고, IMF 모범생으로서 경제위기를 해쳐나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AMF 설립에 소극적이다.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아셈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맹상원의 처지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에게 단 5분을 할애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음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의 지도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 씁쓸하다. 이게 한국 외교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진보진영은 부채 탕감을 위한 재협상과 IMF개혁, AMF 설립 등의 주장을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며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 세가지는 현 시기 재협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진보진영이 불잡아야 할 핵심적인 의제와 방법이다. "부채탕감 없이 제2의 전국 없고, IMF개혁 없이 추가출자는 없다. AMF 설립 없이 제2의 외환위기는 필연적이다." IMF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